

북한이탈주민 소비자보호 대책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이 상 협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05

목 차

제1장. 서 론	2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1
제2절. 연구범위	213
제2장. 북한의 소비자 실태	215
제1절. 북한의 시장화	215
제2절. 시장화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	220
제3절. 변화의 기로에 선 북한 소비자	223
제3장. 소비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실태	227
제1절.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탈북동기	227
제2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현황	228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 실태	230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자보호 대책	234
제1절.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234
제2절. 소비윤리와 소비자법령 교육 강화	236
제3절. 맞춤형 소비환경 조성	237
제5장. 결 론	239
참고문헌	240

표 목차

〈표1〉 북한 장마당 변천사	219
〈표2〉 정착지원제도	229
〈표3〉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23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북한이탈주민¹⁾은 2017년 현재 약 3만 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온전히 대한민국 지역에서 자유롭게 소비활동을 비롯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한 인간으로서, 한 소비주체로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시스템에 편입되어 책임 있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티켓(ticket)을 거머쥔 것이다. 물론 그 티켓(ticket)은 결코 공짜는 아니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 인간의 인생 자체를 망칠 수 있는 위험천만할 수 있는 입장권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개개인들은 북한이라는 특이한 폐쇄적 경제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시스템으로 들어온 이상 새로운 경제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부담을 진다.²⁾ 하지만 이러한 부담을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에게만 맡긴다면 정책당국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미리 온 통일미래’이므로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을 대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앞으로 한 반도 통일시대의 주된 과제인 사회통합을 사전에 실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북한주민을 직접적으로 설득하고 화합하는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이 제대로 대한민국 시장경제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통일을 대비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을 위해 1997년 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규정하고 있어 공식용어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탈북자, 새터민 등으로 불리는 경우도 많다.

2) 최근 장마당의 번성으로 북한의 시장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제2장)한다.

2. 연구의 목적(필요성)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자보호 대책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를 소비자, 기업, 정부로 나누는데,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쟁’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소비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비자들은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끊임없는 경쟁압력을 보내고 이는 곧 기업들 간 경쟁 촉진으로 시장경제의 활력과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경제시스템은 정보의 비대칭성³⁾과 소비자 교육 부족 등으로 소비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금전적·비금전적 피해를 받는 경우도 많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소비자정책당국은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시장경제시스템 내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북한이탈주민은 시장경제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고 여러 가지 소비자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다.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의 특유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소비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습관들과 고정관념 등을 쉽게 버리기 어렵고, 장마당과 같은 북한의 시장화에 어느 정도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현명한 소비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에게도 문제되겠지만, ‘북한이탈’이란 공통의 경험과 과도기적 적응과정을 거친다는 측면에서 다소 집단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과 같이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아닌 불완전하고 다소 폐쇄적인 북한경제체제 하에서 일상적인 소비활동을 한 점을 적극 감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의 북한경제와 함께 현재의 북한경제체제 및 시장화 진행상황⁴⁾을 이해해야 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한 이후 겪는 소비환경과 소비자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정서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것도 이들의 소비심리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북한

3) 시장에서 거래쌍방 중 한쪽만이 특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역선택이란 정보의 차이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경제주체가 결국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덕적 해이란 특정계약 후 정보의 차이를 악용하여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인터넷포탈 daum 학습용어사전)

4) 북한에서는 “세대주인 남편은 사회주의를 하고, 아내는 자본주의를 해야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장화가 확대되고 있다.(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참조)

이탈주민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소비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대책을 검토·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한 소비자보호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면서 소비생활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조만간 대한민국에 들어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예비 북한이탈주민들의 금전적·비금전적인 소비자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강구토록 유도하여 이들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소비자로서 온전히 자신들의 권익을 확보 및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치·군사 이슈와 같이 하드웨어적인 측면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이슈인 ‘소비자’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킴으로써 통일된 한국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시장통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⁵⁾

제2절. 연구범위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에 머물렀던 북한의 경제시스템과 시장화 추세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제 한국에서 겪는 소비자피해상황과 소비여건 등 소비역량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이들에 대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큰 틀의 연구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북한의 소비자 실태」에서는 우선 북한에서의 소비자 개념과 관련 법제를 파악하고, 그간 북한의 경제관리 상황과 장마당 활성화 등 시장화 추세를 조사하며, 이로 인한 소비재와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환경 변화를 살펴본 후 이러한 추세들이 소비자로서의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정리한다. 아울러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소비자 역할을 간략히 정리하여 북한의 시장화와 소비자 역할에 대한 연계성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제3장 「소비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구체적인 현황과 이들의 의식구조,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에서의 소비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정

5)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운영을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경제 분리는 북한 지역에 대한 명시적 차별을 의미하므로 결국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통일상에 부합할 수 없다’는 평가와는 별개로 북한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남북한의 통화, 금융, 재정부문의 한시적 분리운영은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요한다.

책수단들을 면밀히 파악해보고, 이들이 한국에서 겪는 소비자피해를 비롯하여 실제 한국에서의 소비생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자보호 대책」은 정책방안 제시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검토·제시하고, 이들이 대한민국에서의 원활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비윤리와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진정한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한국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소비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맞춤형 소비여건이 조성 되도록 정책당국과 시민사회의 노력 필요성에 대해 적시하고자 한다.

제2장. 북한의 소비자 실태

제1절. 북한의 시장화

1. 북한의 소비자 개념

북한의 경제사전⁶⁾에 따르면 “소비자”라는 법률용어는 없다.⁷⁾ 다만 “소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의 소비자⁸⁾ 개념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동 경제사전에서는 소비의 개념을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사회생산물을 쓰는 재생산의 마지막 고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적 소비와 비생산적 소비로 나누며 보통 소비라고 할 때는 비생산적 소비를 일컫고 재생산의 고리로서의 소비는 생산에 맞서는 개념이라 설명하고 있다. 또 축적(한국의 ‘저축’과 유사)과도 다른 개념으로 보아 소비의 증대는 축적을 감소시키고 축적의 증대는 소비를 감소시킨다고 본다. 또한 소비와 생산 및 축적의 관계는 해당 사회경제제도의 성격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소비”의 개념에서 소비조합, 소비재 등의 용어가 파생된다.

북한의 경제활동 및 질서를 규정한 「사회주의 상업법」⁹⁾(1992년 제정)은 소비자라는 용어 대신에 “인민”이나 “근로자”를 이용한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생산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소비자의 개념은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개념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소비자 ‘권리’¹⁰⁾로서는 인정받

6) 북한의 사회과학출판사에서 출간한 경제사전(1985년 판)

7) 북한에서의 물자소비기준을 규정한 「물자소비기준법」(2009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396호)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주된 대상이다.

8)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한다.

9) 북한은 경제적 가치가 오로지 투입노동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므로 상업에서의 영리추구는 인정할 수 없고 이를 대신하는 경제의 국가적 계획과 고권적 유통질서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상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주의 상업법은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상사관련 법률관계를 직접적 대상으로 하여 물건의 제조, 판매, 운송, 기업소, 도매소, 소매소, 도시와 농촌의 물자 교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의로서의 상법(상거래)의 대상을 다수 포함하고 민법과는 별도로 형성된 상업질서를 규정한 법이다.

10) 주요 권리로서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

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소비재가 국가에 의한 배급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가격 역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비록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필요한 경쟁법이나 소유권보호 제도가 없거나 미비한 상황¹¹⁾이지만, 북한에 소비재 시장이 존재하며, 사실상의 시장경제체제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주장¹²⁾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시장거래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거의 없지만, 합법적으로 인정한 공간 내에서 장사할 수 있는 시간, 연령을 제한하거나 농촌동원 시기에는 장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제는 조금씩 남아 있고, 국가기관의 이름을 걸고 국가상점을 운영하는 개인들은 이러한 시간적, 제도적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 이는 최소한 상점을 열고 닫는 시간은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김정은 정권 이전까지의 북한 경제변화¹³⁾

북한에서의 소비자는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에서 소비생활에 임하는 것이니 만큼 경제체제는 물론 당시 경제성장의 내용과 속도에 상당히 민감하다. 북한은 1946년에 3월 토지개혁, 8월 주요 산업 국유화, 12월 지하자원·산림·수역 국유화 관련 법령을 공포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토지개혁은 일본인과 조선인 대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그 중 일부는 국유화하고 대부분은 농업노동자, 소작농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몰수된 토지면적은 약 100만 정보에 달하며 그 가운데 98만 정보를 영세농과 소작농에게 분배했다.¹⁴⁾ 기업소·광산·발전소·운수·체신 등 여러 분야의 국유화는 1959년경에 100% 달성되

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이 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

11) 북한에서의 민사 및 상업부문을 규율하는 법령은 「사회주의 상업법」을 비롯하여 「민법」(1990년 채택, 2007년 수정보충), 「손해보상법」(2001년 채택, 2005년 수정보충), 「살림집법」(2009년 채택, 2014년 수정보충), 「기업소법」(2010년 채택, 2015년 수정보충), 「사회주의재산관리법」(1996년 채택, 1998년 수정) 등이 있다.

12) 김일성대학 출신 주성하(동아일보 기자)가 대표적이다.

13) 주로 권영경 교수(통일교육원) 강의자료 참조

14) 1955년경에는 전체 경작지의 약 48.6% 정도만 토지집단화가 이뤄졌으나, 김일성의 연안파 숙청 이후 적극적인 토지의 협동조합화 운동 전개로 1958년 100% 토지집단화가 이뤄졌다.

었다. 소규모 개인 수공업조차 국유화되어 완벽하게 사회주의적 경영행태로 변모하게 되었다.

1959년에 완료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신속한 산업생산력의 복구를 토대로 북한은 1960년대 초에 북한식 경제관리 방식을 구축하였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강화되면서 경제관리 방식도 철저한 중앙집권적 지도, 당적 통제, 사상의 우위를 강조하였다. 북한의 경제관리 방식은 소련의 스탈린식¹⁵⁾과 중국의 모택동식¹⁶⁾을 결합한 것인데, 이는 1970년대 이후부터는 북한경제의 침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원래 시장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생산단위를 비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사고를 우선시하는 공산당이 장악·관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혁명완수라는 명분에 종속된 경제정책을 남발하였다.

이에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①자력갱생에 기초한 민족경제 건설 ②중화학공업 우선 건설 ③군사·경제 병진발전 등 3대 경제발전노선을 수립·유지하고 있다. 집중적인 자본축적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려는 고축적 정책에 의거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공업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4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은 겉으로 나타난 “부풀리기”실적과는 달리 당초 목표치가 성공적으로 달성된 적이 없다. 1950년대 후반 연평균 25~30%대의 고성장 실적을 보이다가, 1960~65년 10%대, 1966~70년 5~6%대, 1971~75년 10%대, 1976~80년 4~5%대, 1981~85년 2~3%대, 1986~90년 1~2%대, 199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의 추세를 보인다.

3. 김정은 정권 이후 경제상황¹⁷⁾

김정은 정권은 위에 적시된 3대 경제발전노선을 견지함과 동시에 2014년 우리식 경제관리방식(5.30조치)을 선보였다. 이는 국가의 계획적이고 통일적인 지도하에 사회주의 기업체의 주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조장하는 것이었다. 일한만큼 번만큼 보수를 지급하고, 생산단위를 자율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집단영농체제는 유지하면서도 포전담당제¹⁸⁾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가족영농제를 실질적으로 용인

15) 불균형 성장전략에 의해 군수공업 및 중화학공업은 집중 육성하고 경공업과 농업에서 획득된 잉여는 전부 중화학공업 건설의 재축적 자금으로 활용하였다.

16) 농업·공업간, 중앙·지방간, 지역 간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개발전략을 추구하면서 당이 지도하는 노동자 참여형의 기업관리체계 강조한다.

17) 주로 권영경 교수(통일교육원)의 강의자료를 참조하였다.

18) 집단영농제에서 개별영농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영농 형태로서 중국도 개혁개방 과

하였고 돈주들의 농촌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다. 농업부문의 분배 비율도 정책당국이 농자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초 7(정부):3(농민)에서 4:6으로 조정하였고, 농민 몫에 대한 농민의 자율처분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시장기능 확대를 통한 경제안정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

4. 북한의 시장화 가속

그 동안의 경제관리방식과는 별개로 북한의 시장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는 크게 1994년 김일성 사망 이전, 2002년 7.1 경제관리 조치 이전, 2009년 화폐개혁 조치 이전, 그리고 화폐개혁 이후, 총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¹⁹⁾ 1994년 이전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확실히 주된 역할을 하였고 시장경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1960년대와 70년대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작은 규모의 농민시장 정도였다. 1980년대 초반은 주부들이 수공업으로 제품을 만들어 직매점에서 파는 ‘8.3가내반’이 운용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수산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북한의 1세대 시장 세력이었는데, 해산물을 주로 일본이나 중국에 팔아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

북한의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그 동안 배급과 월급으로 유지되던 계획경제의 골간이 무너진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의 경제는 강제동원 형태로 유지된다. 배급이 없어지자 ‘행방’으로 불리는 개인 행상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국가의 무너진 상품분배망을 대신하였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자리 잡은 시장체제를 일정부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때 북한당국은 종합시장을 인정²⁰⁾해줬을 뿐만 아니라 계획경제 밖에서 기업소 간 계약과 합의에 따라 이뤄지던 거래도 부분적으로 인정해주었다. 그 밖에 기업소의 경영 자율성 부여 및 수익에 따른 분배 차등화, 배급계획 폐지와 임금인상 등 획기적인 시장경제적 요소도 과감히 도입했다.

정에서 이와 유사한 과정을 경험한 바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발행 「북한지식사전」)

19)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여러 가지 구분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탈북기자 주성하 의견에 따른다. 참고로 통일연구원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은 급진적 전환단계(시장세력 제거를 통한 사회주의 개조작업) → 독점화 단계(시장의 잠재력 배태, 시장화 저변의 확대) → 개혁단계(7·1조치 발표와 종합시장 설치, 시장의 제도권 진입)로 구분한다.

20) 2003년 5월 ‘종합시장 운영에 관한 조치’ 등을 통해 상설시장이 개설된 것을 계기로 시장 활동이 합법화되었다.

2009년 김정은의 등장으로 북한당국은 화폐개혁, 40대 미만 장사 금지, 지속적인 시장 검열단 파견 등 고강도의 정책추진으로 북한의 시장세력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당국의 시장말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모든 충격을 이겨냈다. 이는 북한의 시장세력이 정책당국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장세력이 커졌다 하더라도 방대한 군 병력과 악명 높은 공안체제를 갖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1〉 북한 장마당 변천사²¹⁾

시 기	주요 내용
1958년	농촌시장 폐지, 농민시장으로 개설
1984년	농민시장 외 일일시장 개설(시군별 3~4개)
1987~1992년	매일장 폐지 시도했으나 실패
1999년	장마당 폐지 시도 장마당 관리 기관 사회안전성→보위부로 이관
2001년	장마당, 북한 전역에 300~350개 추정 (군 단위 1~2개, 시 단위 3~5개)
2003년	2002.7.1.조치 이후 종합시장으로 합법화 (곡물 및 공산품 판매 공식 허용)
2010년	2005년 하반기~2007년 시장억제 정책으로 전환 추진 2009년 화폐개혁을 통해 계획경제로의 복귀 시도 화폐개혁 실패 이후 장마당 통제·억제정책 크게 감소
2011년	사회주의 계획가격체제에서 시장가격체제로 전환
2012년~현재	2014년 5.30조치(인센티브 인정)로 장마당 급속 확대 전국에 400여개 이상 종합시장 존재 (존스 홉킨스대 발표, 2015.10월)

21) 통일교육원에서 2016년 12월 발간한 「북한지식사전」을 참조하였다.

제2절. 시장화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²²⁾

1. 변화의 큰 흐름

원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결핍의 경제(economy of shortage)로 정의되는데, 이는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빈번하고 심각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 단절·부족으로 인한 초과수요를 증가시켜 암거래에 의한 암시장을 확산시킨다.

북한의 관리·계획된 경제체제 하에서도 시장은 형성·변천되었다. 1단계는 북한정부의 규제 하에 공식적으로 운영되었던 농민시장, 2단계는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북한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자생적 암시장, 3단계는 2003년 계획경제 하에 시장을 포용하기로 한 북한정부의 정책적 조치에 의해 전국 각지에 개설된 종합시장(소비재 유통을 목적으로 한 공설시장)이다.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농민시장(장마당)은 주민들의 자생적인 생존 장터를 급부상하여 북한당국의 운영규칙을 초월한 자본주의적 시장 형태로 변천·확산되었다.

2. 소비재 시장의 변화

2003년 종합시장의 등장은 북한 경제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다. 첫째, 농민시장은 상설화되었고, 매대 수와 상인 수가 증가하면서 시장의 규모도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 제3의 공업도시인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혜산시장에는 매대 수는 2012년 말 3,600개에서 2015년 3월 4,000여 개로 증가하였다. 지역적으로 시장이 분화되면서 시장의 개수 자체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2015년 10월 현재 북한에서 운영되는 공식 소비재 시장은 400~550개로 파악되는데, 이는 2010년(200여개)에 비해 1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으로 분화되어 분업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첫째, 도매시장은 국경에 있던 도시에서 함경북도 청진시, 평안남도 평성시와 같은 대도시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대도시가 국경도시에 비해 접근성이 높고 거래비용도 대폭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급자 중심 시장에서 수요자 위주로

22) 주로 「북한 시장실태 분석」(산업연구원), 「김정은의 북한, 어디로 가나」(주성하 저술)를 참조하였다.

변화하고 품목과 품질의 차별화도 이뤄졌다. 소비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더 큰 규모의 시장이 조성되었고, 중국 각지²³⁾에서 들어온 다양한 수준의 물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소비자들의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었다. 셋째, 대량유통이 가능해졌다. 트럭의 대형화(5톤→20톤→컨테이너 트럭), 수송수단의 다양화(버스, 트럭 등) 및 개선된 도로사정 등으로 유통시스템이 이전보다 좋아졌고, 전문 유통업자의 등장으로 물류, 창고, 금융, 숙박, 목욕탕 등 서비스업도 발달되었다. 물자의 대량유통으로 상품공급이 증가하고 상품가격이 안정되었다. 넷째, 생산수단의 사유화 현상이 나타나고 수공업을 중심으로 수입대체 상품으로서 북한산 제품의 품질도 향상되었다. 다섯째, 소비재 시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금융·부동산·노동·생산재 시장 등 비공식적인 소비재 이외의 시장이 형성·발전하게 되었다. 돈주의 역할이 확대되고 사회적 위상이 제고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소비재 시장은 생산재나 생산요소시장보다 규모나 제도적 측면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이러한 소비재 시장의 발전은 다른 시장부문의 발전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소비자들의 실생활에서의 편익과 효용을 제공하면서도 단지 ‘소비’시장에 그치지 않고 ‘생산’을 자극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인 기업을 싹트게 하였다. 개인 기업은 기존의 국영공장·기업소와 협업에 의해 생산을 진행하여 국영공장·기업소의 생산을 자극하였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시장화 및 시장경제활동을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종합시장에서 장사하는 영세상인이 아니라 유통구조의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무역회사, 특권계층, 돈주 및 화교들이라는 지적도 있다.

3. 서비스 시장의 변화

소비재 부문의 시장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비스 시장도 같이 성장하게 되었다. 소비재 시장의 확대는 유통, 수송 등에 대한 시장수요를 창출하였다. 시장화로 서비스 공급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 여력을 가진 개인이 늘어났고, 새롭게 창출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늘리기 시작했다. 스스로 축적한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금융을 활용하여 필요한 투자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다만,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없는 북한 체제하에서 개인 투자를 통한 서비스 공

23) 단둥-신의주-평성에 유입되는 상품의 원산지는 주로 중국의 남방지역이고, 혜산-청진에 유입되는 상품의 원산지는 동북3성이다.

급역량 확충은 기존의 제도와 충돌할 위험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 행정, 의료, 교육 등 보편적으로 국가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가 개인에 의한 서비스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시외버스를 중심으로 한 운수서비스, 종합시장, 직영매점, 소규모 매대, 백화점 및 대형 유통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상업 및 유통 서비스, 식당,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시장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다. 시외버스의 경우 도청 소재지나 대도시 간을 연결하는 시외버스망이 구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전국적인 시외버스망은 국가의 재정투자가 아닌 개인의 투자에 의해서 이뤄졌고, 운영 역시 개인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의 투자와 운영을 통한 전국적인 시외버스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운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투자를 할 여력이 없는 국가와 투자 능력과 의사는 있지만 개인이 사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법적인 제약 하에서 안정적인 투자와 사업운영이 어려운 개인이 국가기관 소속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적인 영리활동을 하고, 이를 통한 수익을 국가(기관)와 개인이 배분하는 일종의 제도적 타협에 도달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전제품 등의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시장공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북한 서비스 시장의 발달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동전화 시장이다. 국정가격에 의한 국가 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유선 통신과 달리 무선통신 서비스는 단말기를 사고,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누구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서비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선통신 서비스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시장을 국가가 외국 자본과의 협력을 통하여 창출하였고, 이렇게 창출된 독점시장을 통하여 국가는 상당한 투자를 유치하고, 재정자금²⁴⁾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⁵⁾ 휴대전화 보급으로 시장과 정보유통의 활성화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참고로 북한은 중요 간부들에게는 자국의 휴대전화 사업에 진출한 이집트 기업 오라스콤의 통신망과 별개의 통신망을 쓰는 휴대전화를 지급했다고 한다.

24) 2012년 상반기 이집트 기업 오라스콤 텔레콤의 세전 영업이익만 5,160만 달러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가입비, 휴대전화 판매비 등으로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개성공단의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5) 2008년 12월 오라스콤 텔레콤이 북한과 합작 투자형식으로 고려링크를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서비스 초기에는 가입자가 1만 명 미만이었는데, 개통 2주년인 2010년에는 43만 명, 2012년은 100만 명, 2013년 5월에는 200만 명까지 사용자가 늘어났다.(조선자본주의 공화국, 다니엘 튜더와 제임스 피어슨 공저)

제3절. 변화의 기로에 선 북한 소비자

1. 시장경제 기본 작동원리

통상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²⁶⁾이 작동하는 것이라 본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오직 자신만의 이익(사익)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누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더라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시장경제의 암묵적인 자율 작동 원리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쓴 소위 ‘국부론’에서 인용되어 시장경제의 원동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제논리이다. 애덤 스미스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 각자에게 무엇을 얼마나 살지, 무엇을 얼마나 만들어 팔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맡겨두면 시장이 모든 구성원에게 유익한 가격 및 수급균형을 찾아 준다고 보았고, 그 주된 원동력은 ‘개인의 이기심 경쟁’에서 찾는다.

시장에서의 분업과 교환을 통해 사람들은 자급자족하는 것에 비해 더 많고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기회비용²⁷⁾을 혁신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이고, 이는 결국 사회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가능케 한다.

분업과 교환이 원활히 이뤄지고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각자의 이익이 조정되어 자기 이익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 시장에서 구매자는 가격적 낮은 가격을, 반대로 판매자는 가격적 높은 가격을 고수하려 한다. 이러한 이기심의 상충은 일련의 가격홍정을 통해 해소되어 점차 각자가 만족하는 합의된 균형에 도달한다. 시장의 수요·공급 균형은 가격이라는 수단을 매개로 시장 참여자 사이에 이기심 경쟁을 벌여 얻은 일종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격작동체계는 특정 경제세력이 의도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제3자가 중재하여 결정될 수도 없는 자율적인 작동기제인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이러한 가격결정시스템에 경제주체들인 가계, 기업, 정부가 편입되어 각자의 경제활동을 영위한다.

26)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도덕철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저서 『국부의 성격 및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유래한다.

27)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기회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그 자체 또는 기회가 갖는 가치(보이지 않는 비용)를 일컫는다. 이는 어떤 선택을 위해 실제로 지불한 비용 가운데 회수할 수 없는 비용(소위 ‘매몰비용’이라 하고 보이는 비용)과 다른 개념이다.

2. 시장경제의 불완전성 극복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다수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공감하는 수단에 한정했다.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도둑질, 사기, 사유재산 침해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로 이뤄져서는 아니 되고 가격을 흥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자의 이기심에 기초한 시장경제가 남들을 배려하는 태도를 통해 더 잘 작동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간혹 강력한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원용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정부의 역할, 즉 ‘보이는 손’이 필요성을 용인하였다. 시장경제시스템을 유지하는 많은 국가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보장하는 수정자본주의를 운용하는 이유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는 ‘욕망’과 관련이 깊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근대 이후 사람들의 소비활동에서 기업의 마케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²⁸⁾ 기업들은 치밀한 마케팅 전략을 짜고 지속적인 광고 노출로 소비자들이 욕망을 갖게끔 유도한다.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소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업들은 부단히 노력한다. 명품 브랜드 전략을 구사하거나 감성적인 디자인이나 이미지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사의 제품을 대중에게 노출시키고자 한다.

특히 소비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상품의 효용이나 사용가치 이상의 허구적 체험가치를 제공한다. 자아도취적 소비는 명품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증대시키고 좀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성형수술도 마다하지 않는다. 자아(personal identity) 자체가 소비와 욕망의 궁극적 대상이 된다. 자아는 서양의 문화와 전통 아래 자본주의가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주입된 허상이라 할 수 있다.²⁹⁾ 물론 욕망은 인류가 나타난 이후 계속 존재하고 있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욕망은 자본의 축적이나 화폐의 흐름처럼 무한정 증폭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들 내면의 욕망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기 때문에 사회적 병리현상인 중독성 소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이 상품화(유동화)될 수 있고 모든 상품은 화폐로 환산되어 교환될 수 있기 때문에 화폐

28) 주로 네이버 지식백과「자본주의와 욕망-욕망의 병리현상」(조흥길 작성)을 참조하였다.

29) 신경과학에서는 자아가 뇌의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전두엽과 관련이 있거나 뇌 전체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추정한다.

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이 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것은 시장경제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의 몫일 것이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장 광고와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태를 제재하고, 재분배를 강화하며 경쟁질서 확보, 소비자권의 확립 및 증진 여건조성 등도 중요하다.

3. 對노동당(계획경제), 장마당(시장경제)의 우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난으로 북한사회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친다.³⁰⁾ 국가공급제도의 유명무실로 기성 세대주의 역할이 줄어들고, 자립적 생존 방식이 대두됨에 따라 가정주부들의 부담도 증가하였다. 이에 여성에 의한 이혼³¹⁾ 요구도 증가하는 등 북한 여성의 삶은 가족생계, 자녀양육, 가사 등 다중고에 시달린다.³²⁾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시장화로 북한은 점차 시장경제로 이전하고 있다. 장마당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이 거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장사해서 돈을 벌고 있다. 시장에는 곡식, 육류, 채소 등의 식재료부터 평면TV, 노트북,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제품, 잡화까지 온갖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다. 수입산 시계, 스위스 커피와 한국 신라면도 있고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일부 지역에 한정된 이야기이지만 전화 한통이면 배달도 가능하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³³⁾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장마당에서 옷을 산 경험이 있고, 식재료를 비롯한 다른 생필품들도 장마당에서 대부분 구입했다고 답변했다. 또 112명의 응답자가 ‘상행위’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30명은 전업으로 장사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더 이상 예전처럼 정부의 통제가 먹혀들어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장마당은 새로운 계급도 만들어냈다. 점점 확산되는 장마당에서 돈을 모아 북한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신흥 부자인 ‘돈주’가 그들이다. 북한의 공식용어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장마당에서 돈놀이를 하는 일수꾼부터 거액의 돈

30) 「북한의 여성·가족제도 실태」(통일교육원 정은찬 교수)를 참조하였다.

31) 북한은 1956년 3월 합의에 의한 이혼제도를 폐지하고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2) 여성 인권에 대한 주민의식 미성숙으로 가정폭력, 인신매매 등도 발생하고 있다.

33) 북한이탈주민 147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에 실시하였다.

을 굴리는 슈퍼리치까지 폭 넓게 사용되는 용어로 정착했다.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사업이나 개발에는 어김없이 돈주들의 자본이 투자된다. 최근 3~4년간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는 돈주들의 역할이 컸고, 오늘날의 북한 경제는 개인 사업가인 돈주들에 의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⁴⁾ 부동산 시장도 돈주들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는데, 북한 전역에서 일고 있는 아파트 건설 붐도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시장억제정책을 쓰는 대신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자릿세 등 징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 경제가 오히려 장마당에 의존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권력을 우선시하였던 북한에서 돈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노동당 간부 아내도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현재 노동당에서 장마당으로, 권력에서 자본으로 주도권이 옮겨지고 있다.

4. 북한 소비자들의 인식변화

시장화로 북한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당 간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었다면 지금은 해외에서 일할 기회가 부여되는 평양건축공업대학이 뜨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중국어 공부 열풍이고, 돈이 우선으로 간주된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배급시스템이 무너져 먹고 사는 문제를 자체 해결해야 했던 세대들은 국가가 아닌 장마당이 보호자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회주의 국민이지만 내면은 이미 자본주의화, 개인주의화가 된 상태이다. 돈을 벌어서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게 아니라, 없어도 되지만 ‘사고 싶은’ 물건, 즉 기호품이나 사치품을 산다. 이는 북한에도 소비주의가 만연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북한 주민의 모습은 대한민국에 사는 일반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아직까지는 남한과 북한의 소비생활 여건은 크게 다르지만, 이전보다 그 간극이 점차 좁아지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을 움직이는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 불공정한 적자생존 방식이지만, 적어도 평균적인 시민에게 자신이 삶의 주체라는 자의식과 스스로 생계를 이을 기회를 주고 있다.³⁵⁾

34) 돈주들은 북한의 국영회사나 중국 무역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가 꽤 많다.

제3장. 소비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실태

제1절.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탈북동기

1. 현황

북한이탈주민 수는 2017년 6월 기준으로 30,805명에 달한다.³⁵⁾ 남자는 8,891명, 여자는 21,914명이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정의된다. 대한민국에 입국함과 동시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우리 국민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2. 성공적인 정착지원 필요성

이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은 2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³⁷⁾ 첫째, 통일 후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을 준비하는 상호교류와 사회통합의 연습장을 제공하여 남북한 주민이 편견과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신뢰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사회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양성될 수 있다. 통일은 북한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도전이므로 이들의 가치관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게끔 지원하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 공유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북한이탈 동기의 변화

최근의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는 단순히 배고파서 식량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당초 북한이탈의 시

35) 전·현직 영국 기자들이 쓰고 북한의 밑바닥 자본주의 실체를 제대로 알린 것으로 평가받는 <조선자본주의 공화국> 을 참조하였다.

36) 통일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37) 「통일문제 이해」(통일교육원)를 참조하였다.

작은 1990년대 러시아에 있는 별목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탈출이고, 그 이후에는 중국으로의 대규모 탈북이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과 중앙배급체계의 붕괴가 핵심적이었다. 경제난으로 가정의 해체되어 꽃제비 등 고아들이 급증하면서 이들도 대거 탈북행렬에 동참하였다. 초창기에는 남성 중심으로 탈북이 이뤄졌으나 점차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되고 있다.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주된 원천인데, 이들은 중국의 단속에 따른 강제송환과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내 단속 강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2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현황

1. 주요 지원 체계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입국하면 우선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과정(1~2개월)을 거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12주(420시간)의 사회적응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³⁸⁾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이수 후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정착가산금, 고용지원금 등 각종 정착금을 받고 각 지역(지방)에 거주하게 되며,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지역에서 각종 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의 정착 지원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보호담당관(거주지보호, 취업보호, 신분보호), 정착도우미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2. 교육지원 체계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³⁹⁾에서는 3주간의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고 1년간 사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실제 거주지에서 지자체, 고용지원센터, 정착도우미, 지역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심리·진로상담, 생활정보 제공, 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

38)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시설이다.

39) 정착지원법 제15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2016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23개의 지역적응센터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⁴⁰⁾ 가족동반으로 또는 단독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숫자도 크게 증가⁴¹⁾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응,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디딤돌학교 성격의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그 밖에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탈북 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 운영도 다수 지원하고 있다.

〈표2〉 정착지원제도⁴²⁾

구분	항목	내용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최대 2,510만원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등 최대 1,540만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 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취업	직업훈련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급(노동부)
	고용지원금	급여의 1/2(50만원 한도) 최대 4년간 지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고용지원센터 지정, 취업상담·알선
	기타	취업보호,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 등
사회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인 세대 월 약 50만원)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 없음)
	연금특례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대상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학비 지원	중·고·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정착	-	세대당 1-2명 정착도우미 지정(초기 정착지원)

40) 교육부는 2008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산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1) 총 입국 인원 중 10대 청소년은 12%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중단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2)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구분	항목	내용
도우미		
보호 담당관	-	거주지보호담당관(230여명), 취업보호담당관(57명), 신변보호담당관(약 800여명)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 실태

1. 실태조사 개요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지난 2015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사회에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실제 소비생활에서 느끼는 곤란한 점과 문제점 등을 조사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한 집중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통일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자 및 관련 정부 산하기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통일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다.

집중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소비자역량 설문참가자 621명 중 남한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0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인터뷰 질의내용은 남한적응 시 가장 힘든 소비생활, 남한에 와서 가장 먼저 갖고 싶은 물건, 북한 장마당에서 구입했던 물건, 북한에서 본 남한드라마와 직접 남한에 와서 현실에서 느낀 점 등 약 17여 종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집중 인터뷰와 병행하여 전문가 간담회도 2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비생활에 대한 자료인 만큼 참고⁴³⁾할 만 하다고 본다.

2. 실태조사 결과

1) 집중 그룹 인터뷰 결과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 걱정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에서의 소비생활의 주된 특징은 남한에서의 소비생활에 집중하기 보다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남한에서

43) 이 밖에 여러 가지 참고자료가 있다. 예로 한국소비자원(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거래피해유형은 다단계 등 특수판매사기, 핸드폰, 보험서비스 등의 피해, 보이스피싱, 과잉부채, 소비자차별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 「취약소비자 보호법제 개선방안 연구」)

돈을 벌어서 브로커를 통하여 송금하고 있고, 그 돈은 북한 경제의 시장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일부 평가도 있다.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여건이 되면 통일 이후에 청진 등 북한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한다. 이들은 통일이 되면 한국의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 같은 것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소극적인 소비활동

지방에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서울로 이동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실제 소비자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험은 없다. 그냥 소비생활에 불편이나 불만이 있었던 곳이나 물건은 피할 뿐이다. 예를 들어 홈쇼핑에서 한번 구입한 제품에 불만이 있으면 다시는 구매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 다시 확인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상품광고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처음에는 무조건 다 믿고 구입했다가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야 속고 산 것을 안 경우도 많다. 특히 보험의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을 가입하여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불법 다단계와 같은 금융사기에 노출 위험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불법 다단계 판매원으로 취업하여 문제된 경우도 있다. 한국에 먼저 온 북한이탈주민들은 신규 북한이탈주민에게 보험과 다단계를 조심하라는 조언해주고 싶다고 한다. 금융에 대한 공부도 권한다. 북한에서 은행거래를 거의 한 적이 없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내려와 은행거래를 많이 하지만 대출을 받는 경우는 없고 개인 간의 거래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물론 탈북자에 대한 대출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자혜택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하나원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소비생활 용어의 생소함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들어와 언어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생소한 용어도 많아 소비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이유식이라는 단어를 몰라 그냥 남한 여성들이 장보는 것을 따라 사는 경우도 있다. 생소한 용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같이 외래어(예: 로얄 패밀리, 라벨지)로 된 단어가 너무 많아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남한생활 적응을 빨리 하기 위해 영어공부 등을

하려고 해도 시간을 내기 어렵다.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자식들의 영어공부를 위해 유학을 보내거나 한국을 떠나려는 시도도 한다.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의 용어(예: 세탁세제 제품명) 도 익숙하지 않다.

어색한 남한 소비문화

브랜드의 가치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왜 명품을 비싼 가격을 주면서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갖는다. 신용카드 사용도 어색해 한다. 통상 돈을 먼저 주고 물건을 구입하는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이후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을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신용카드는 빚지는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다. 또한 북한과 달리 제품들이 너무 많고 종류도 다양하여 선택하는데 곤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다.

2) 전문가 간담회 결과

출신, 연령 등에 따라 적응정도가 다름

우선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즉, ①평양 출신인가 아닌가? ②바로 대한민국에 왔는가? 아니면 중국 등 다른 나라를 거쳤는가? ③장마당 경험세대인가? 아닌가? 이다. 또 연령 및 세대 차이에 따라 사고방식이나 소비자역량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20대의 경우 한국에 와서 교육이나 대외정보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반면, 40대 후반은 비정규직에 근무하면서 생계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또한 35세 미만까지만 학교교육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사이버대학에서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힘들고 고단한 남한사회에의 정착

북한이탈주민들은 대체로 남한생활에 적응력이 뛰어나고 생활력도 강하다. 또 이들은 일반인들이 겪지 못할 정도의 힘든 과정을 거쳐 남한으로 왔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생활전선에 뛰어 드는 것은 잘 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고마움을 모르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대한민국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잘 모르고 당연시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지각을 해도 미안함을 모르고 감사함을 표현할 줄 모른다는 평가도 받는다.

새터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도 싫어한다. 단기 시간제 근무나 아르바이트도 지속적으로 하기 보다는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돈만 벌 수 있으면 무슨 일 이든지 감행할 정도로 돈에 대한 애착심도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직장 업무에서 서비스 정신도 부족하고 왜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한 투철한 사명의식도 없다.⁴⁴⁾ 물론 이러한 측면의 북한이탈주민 성향을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고 극히 경계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고 실질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참고할 만 하다고 본다.

3. 정책적 시사점

위에 적시한 실태조사 결과는 주로 부정적인 내용을 위주로 기술한 측면이 없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소비생활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⁴⁵⁾하면 너무 상황을 심각하게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각종 우려사항과 불안정한 거래여건 등을 현실 그대로 파악하여 개선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소비활동에의 걸림돌 제거 노력은 1차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시장거래 여건을 좀 더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조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4) 북한이탈주민들은 법 준수 의식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 문화차이라고 말한다. 시간약속이나 학교에 아이들이 가지 않는 것도 북한에서는 엄마가 일하기 때문에 동생 돌보는 일이 더 우선시 되어서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남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45) 한국소비자원 발표(2015. 8. 12.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84.2%가 최근 1년 내 경험한 소비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점수는 평균 67.6점으로 '2015 한국의 소비생활 지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일반국민 20~40대의 평균 62.7점과 비교할 때 4.9점 높은 수치이다.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자보호 대책

제1절.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1. 관련 소비자보호 법·제도 현황

우리 대한민국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시장경제 작동의 기본원리인 “경쟁” 시스템 하에서는 사업자들 간에 가격경쟁, 품질경쟁, 서비스경쟁 등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부당·부정한 경쟁으로 소비자들의 금전적·비금전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불안정한 시장경쟁시스템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주요 국가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하여 일반법 성격인 「민법」과 「상법」등과 별개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별법적 성격의 법령들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보호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보호 관련법과 제도들을 대강의 내용이라도 숙지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하나원을 비롯해 여러 유관교육기관, 정책당국 및 지역단체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장치(규제) 유형은 규제자, 취약소비자, 사업자라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규제, 민사규제 및 자율규제가 있다. 정부규제는 형사제재와 행정제재가 있는데, 행정규제는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등이다. 민사규제는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금전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보전과 원상회복을 민사법원을 통해 구하는 것이다. 자율규제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책무로서 취약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체기준과 규정을 개발하고 취약소비자에 대한 사전·사후 모니터링하고, 취약소비자의 피해와 불만을 처리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소비자보호법제로는 「소비자기본법」⁴⁶⁾,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규율),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46)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지정·고시 근거규정(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를 제정했는데, 내용 중에 취약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다.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조서비스, 할부거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구체적인 보호내용은 청약철회, 소비자의 항변권, 불공정약관 무효,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이다.

2. 제도개선 사항

일반 소비자에 비해 소비자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북한이탈주민은 취약소비자계층으로 볼 여지가 큰데, 소비생활에서의 실질적인 평등권 확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요한다고 할 것이다.⁴⁷⁾ 현행 「소비자기본법」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동등한 대한민국의 한 일원이면서도 이들에 대한 거래관계에서의 특별한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기본법」이 아니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우선 「소비자기본법」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의 책무도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표3〉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국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대한민국에의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47) 취약소비자의 취약성의 사유를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기타 사유로 확대할 것인가에 따라 취약 소비자의 범위가 결정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으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안전 분야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약소비자계층으로 보긴 어렵다. 하지만 취약소비자보호영역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중 소비생활이고, 소비생활은 취약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연계하면 안전취약성영역, 거래취약성영역, 분쟁해결취약성영역 등을 포함해야 한다. (김성천, 「취약소비자 보호법제 개선방안 연구」)

이밖에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금융법제에도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포함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본다.

제2절. 소비윤리와 소비자법령 교육 강화

1. 건전한 시장경제 이해제고

북한이탈주민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강하다. 또 집단주의(전체주의)적 사고방식⁴⁸⁾으로 인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행사할 경험도 일천하다. 실질적인 선택권 상실은 무기력증을 가져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의 눈치를 보거나 힘든 일은 안 하는 성향을 낳는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 소비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소비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감사인사나 사과인사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부터 챙기는 것이 좋다고 본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생활총화⁴⁹⁾ 영향으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표현도 상당히 어색해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거절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것도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⁵⁰⁾

또한 남북한 언어 이질화에 대한 상호 이해와 함께 언어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어휘차이(영어, 외래어, 한자, 억양차이⁵¹⁾, 화법⁵²⁾ 등의 차이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제2장 제3절)한 바와 같이 시장경제는 각자의 이기심에 기초하여 잘

48) 예를 들어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의식을 말하며,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알아서 하라”는 말에는 상당히 당황스러워 한다.

49) 생활총화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과 사생활 등에서 나타난 잘못을 비판하는 이른바 자아비판 및 상호 비판 회의다. 북한 사회과학 출판사가 펴낸 《조선말대사전》은 ‘총화’를 “진행 중인 사업이나 생활에 대해 그 결과를 분석하고 결속 지으며 앞으로의 사업과 생활에 도움이 될 경험과 교훈을 찾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daum 오픈지식 참조)

50) 북한이탈주민들은 상대방에게 거절하는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피하는 경향이 있다.

51) 북한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생활총화로 목소리가 크고 발음이 빠른 측면이 강하다.

52) 북한은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남한처럼 의례적인 인사말 표현에 오해를 가질 수도 있다.

살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지만 부정·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극도로 이기적인 행태는 용납하지 않는다. 남을 배려하고 지속적인 조정과 상호 협력으로 시장경제는 더 잘 작동할 수 있음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2. 특화된 소비자교육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들에 특화된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 맞춤형·생애 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정착단계부터 부문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는 소비자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운영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에 소비자 교육지원 조직을 신설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사는 북한이탈주민 출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되고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간의 문화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소비자교육의 지원 및 확대도 필요하고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교육 강사로 육성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고 본다. 교육내용은 주로 소비자보호법·제도,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유형과 대처방안, 분쟁해결절차 등이다. 실제 발생한 사례를 위주로 교육하고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훈련하는 상황극도 입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것이다.

제3절. 맞춤형 소비환경 조성

1. 쌍방향 소통채널 구축 필요

소비자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제3장 제3절)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요구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북한 출신 고급인력도 증가하고 있으니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인적 구성에 북한이탈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②북한이탈주민 관리를 지역행정을 총괄하는 주

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통일부는 지방행정조직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③통일 이후에 북한사람들과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도록 이북5도청 기구 구성원에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되어져야 한다. ④현재의 하나원의 교육내용과 강사 등이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⑤북한지역 탈출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⑥북한에서 왔다고 헌옷 등 재활용 용품을 제공하는 등의 취급은 안했으면 좋겠다.

2. ‘미리 온 통일미래’를 ‘소비자로서 행복한 통일미래’로

위 요구사항들을 담당 부처에서 바로 수용하기는 곤란할 수 있지만, 이들의 주된 요구는 소통을 강화해달라는 것이다.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소비자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다소 소비생활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것이 의아할 수 있지만 소비생활 자체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되는 것이니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들은 ‘미리 온 통일’이고, 제대로 대접하고 지원하는 것은 통일된 미래한국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소비활동에서 행복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맞춤형 소비여건을 마련·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기관 등 공적 기구에 북한이탈주민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역(지방) 기구의 역할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설정하며, 또 이들 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지원시스템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실생활에서 불안감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수집·분류 및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시기적절한 치료나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한한국의 소비자 일원으로 받아들여 소비자단체의 구성 및 운영을 독려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비자운동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5장. 결 론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의지와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정부의 자립·자활을 돕는 체계적인 정착지원 정책과 남한 주민의 따뜻한 이해와 포용도 필요하다.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통합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의 신뢰와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오고 북한 주민의 기대와 호감을 유도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성공적인 정착은 남한 사회에서의 만족스러운 소비생활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것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책임감 있게 소비활동을 자유롭게 영위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미 북한에서 장마당을 통해 어렵פות이 시장경제를 접하긴 했지만, 공정하고 자유로운 규율이 정립된 경기장 위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남한의 시장경제시스템을 곧바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소비자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좀 더 세밀하게 정비하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원활하게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좀 더 강화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담보할 필요가 있겠다.

“소비자”로서, “미리 온 통일미래”로서 북한이탈주민도 자신의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인지하고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고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활동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끝.

■ 참고문헌

《일반문헌》

- 임수호, 최장호, 민준규, 이상민, 최유정. 2016.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영찬, 김범환, 홍석기, 박현석. 2016.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 통화·금융·재정 분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손광락, 권남훈, 김원중, 박경로,성한경, 정태훈 번역. 2016. 「경제학원론」. 시스마프레스.
- 주성하. 2012. 「김정은의 북한, 어디로 가나」. 기파랑.
- 임강택. 2009.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 남북하나재단. 「2015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I」.
- KBS 명견만리 제작팀. 2016. 「명견만리: 인구, 경제, 북한, 의료 편」. 인플루엔셜.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국회예산정책처. 201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 이관세, 홍순직, 장용석, 장철운. 2016. 「북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 김성천. 2014. 「취약소비자 보호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 다니엘 튜더, 제임스 피어슨. 2017. 「조선자본주의 공화국」. 비아북.
- 손행선. 2011. 「북한의 경제범죄와 처벌」. 한국학술정보(주).
- 이석기, 양문수, 정은이. 2014. 「북한 시장실태 분석」. 산업연구원.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1985. 「경제사전 2」.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통일문제 이해」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북한이해」
- 배순영. 「2015 통일 소비자정책 연구(Ⅱ) :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자역량 실태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제12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 강의자료》

- 권영경(통일교육원). 「북한경제의 시장화와 경제시스템의 변화」
 권영경(통일교육원). 「북한 경제체제와 경제시스템」
 권영경(통일교육원). 「남북 경제협력의 전개과정」
 차문석(통일교육원). 「북한의 정치 행정체제의 구조」
 정은찬(통일교육원). 「북한 사회의 계급·계층 구조」
 정은찬(통일교육원). 「북한 여성·가족제도 실태」
 정은찬(통일교육원).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의식구조」
 김중태(통일교육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와 과제」
 박형중(통일연구원). 「북한 정치 변동의 가능성과 전망」
 홍 민(통일연구원). 「북한주민의 생활변화와 일탈실태: 시장화와 의식변화」
 배종렬(통일연구원). 「북중경제관계의 현황과 과제」
 조정아(통일연구원). 「북한 교육제도와 교육실태」
 김수암(통일연구원). 「국내외 탈북민의 실태와 과제」
 이석기(산업연구원). 「북한 산업실태와 과제」
 권태진(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 「북한 농업실태와 과제」
 조영서(前 평화자동차회사 총사장). 「경영자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 경제협력」

《인터넷 참고자료》

- 다음 학습용어사전. 천재교육 편집부.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X69377>
 레포트월드 흥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우현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분석 (1) -통일을 대비한 북한 상업구조의 이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4/2017090402766.html
 네이버 지식백과 「자본주의와 욕망-욕망의 병리현상」(조홍길 작성)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551&cid=59059&categoryId=59059>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5. 8. 12.) “북한이탈주민, ‘소비자역량’ 일반국민보다 낮지만 ‘소비생활만족도’ 높아”

